

데스크 시각



장필수 사회당 편집국장

지난 4일 광주시의회에 열린 기자회견장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인 정진영(92) 할머니가 '내 목숨 값 931원'이란 피켓을 들고 카메라 앞에 섰다. 할머니는 일본 후생노동성 산하 일본연금기구가 자신의 통장으로 931원을 송금한 사실을 공개하며 "애들 과자값도 아니고...이걸로 일본 사람들 똥이나 뉘으랴"며 분개했다.

931원은 99엔을 우리 돈으로 환산한 것으로, 할머니가 일본에서 강제노동을 할 당시 받아야 했던 후생연금을 77년만에 액면가 그대로 보낸 것이다. 할머니는 열네살에 일본 나고야의 미쓰비시중공업에 끌려가 1년 넘게 노역에 시달렸지만 한푼도 받지 못했다. 노역기간 가입했던 후생연금을 탈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수십년 지나 알고 신청했지만 일본 정부는 계속 거부하다 할머니가 내린 연금번호를 받고서야 마지못해 인정했다.

일본 정부는 연금탈퇴 수당을 지급할때 회계까지 변동에 따른 차액을 보전해 주는 규정을 일본인에게 모두 적용했지만 정 할머니처럼 한국인 피해자들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후생연금 탈퇴수당 '99엔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9년에는 양극덕 할머니에게도 99엔을 지급했다가 공분을 샀다. 그나마 당시 환율로는 1000원이었다.

강제징용 피해배상 문제로 시험대 오른 외교력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가 다시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대법원의 자산매각 결정을 앞두고 한일 외교의 핵심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조만간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내 상표권과 특허권에 대한 자산매각(특별 현금화 명령)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전범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4년 전 대법원 판결과 그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 판결을 이끌어낸 사람은 나자와 순천 출신인 양극덕·김성주 할머니다. 이들은 10년동안 미쓰비시를 상대로 8차례나 소송을 제기했고 모두 승소했지만 미쓰비시가 위자료 지급을 미뤄 강제 자산매각을 통한 현금화 결정을 앞두고 됐다.

미쓰비시 자산매각 결정에 촉각

양극덕·김성주 할머니 사건이 주목받는 이유는 배상을 미루는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첫 자산 강제매각이란 점 때문이다. 이 사건 결정에 따라 소송중인 나머지 판결은 물론 한일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렇다보니 그동안 미동조차 하지않던 미쓰비시는 대법원에 자산매각 보류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선고를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문제는 우리 외교부의 태도다. 외교부도 미쓰비시와 비슷한 시기에 대법원에 의견서를 냈는데 민관협의회를 꾸려 일본과 교섭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자산이 강제 매각될 경우 일본의 보복이 우려된다고 은근히 재반부를 압박했다.

윤석열 정부는 한일 관계 복원을 위해 강제징용 피해배상 문제를 활용하는 듯 하다. 박진 외교부장관이 취임 직후 일본에 건너가 '대법원의 현금화 결정 전 해법

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한 것을 보면 일본 정부와 어느 정도 입을 맞추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이런 태도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물론 국민 정서와도 맞지 않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물론 국민 정서와도 맞지 않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물론 국민 정서와도 맞지 않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물론 국민 정서와도 맞지 않다.

저자세 외교 대신 국민 권익 우선해야

가해지는 피해자가 됐다'고 할때까지 용서를 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한발짝도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이런 마당에 우리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가 한일 관계 복원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면서 일본 눈치를 보고 있으니 한심할 따름이다. 급기야 윤석열 신임 주일대사는 8일 한국특파원 간담회에서 일본 기업에 대한 자산매각 결정이 이뤄지면 일본의 보복으로 양국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몰려 수백조원의 사업기회가 날아갈 수 있다는 발언으로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정부는 민관협의회를 통해 해법을 찾겠다고 하지만 피해자들은 처음부터 참여하지 않았고 피해자 지원단체마저 최근 탈퇴해 동력을 상실했다.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를 풀겠다는 노력은 가상하지만 접근 방법이 틀렸다. 우리 사법부를 압박하고 피해자들을 달랠 것이 아니라 전범기업과 일본 정부로부터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내는 외교력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라는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bungy@kwangju.co.kr

은펜칼럼



심상돈 동아병원 원장

7월24일 서울아산병원의 간호사가 뇌출혈로 사망했다. 당시 근무 중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로 쓰러진 후 뇌혈관 중재시술을 하였고 출혈이 멈추지 않아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뇌혈관외과 의사의 부재로 서울대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사망한 일이다. 매우 안타까운 사건으로 먼저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유가족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고인이 속했던 병원은 우리나라 5대 병원 중 하나로 시설, 규모, 인력, 시스템 등이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이다. 이러한 병원에 당시 수술을 집도할 의사가 한명도 없었다는 사실은 공감을 넘어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의 업무와 연관성, 의료진 부재와 이송에 시간이 지체된 이유 등에 대해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 한편에서는 자본의 논리를 추구하려 했던 결과로 의사사회 전체를 지적하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이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인 중증 필수의료 분야 인력부족이

필수의료 공백과 어느 의료인의 죽음

그 원인이다.

뇌동맥류는 뇌혈관 벽이 약해져 파리처럼 부풀어 있다가 터지는 초음속 질환으로 크기, 형태, 위치 등에 따라 중재시술 또는 뇌혈관외과수술로 치료한다. 'Big incision make surgeons to big'이라는 농담만 진단반의 말이 있다. 수술할 때 절개를 크게 할수록 좋은 의과 의사가 될 수 있다는 뜻이지만 최첨단 인공지능 시대를 살고 있는 요즘의 의과 의사들에게 이런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 그동안 모든 의료, 특히 외과분야는 최소 절개, 최소 침습의 방향으로 발전해 왔기 때문이다. 수술 시 주변조직에 대한 불가피한 손상을 줄여 수술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위험요소를 최소화 하고 치료의 결과를 최대화 하자는 의도였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위장관 내시경 수술, 심장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 흉복강경 수술, 관절경 수술 등이 발전해왔고 최첨단 위성항법장치와 미세로봇이 의료에 등장한 것도 이미 10년이 지났다. 뇌혈관외과수술이 코일과 스텐트를 이용한 중재시술로 발전한 것도 과학과 역사의 발전이고 시대의 흐름이다. 물론 모든 뇌동맥류를 중재시술로만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뇌혈관외과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우리가 주목해야할 사실은 서울아산병원에 뇌혈관외과 교수가 2명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는 중재시술의 증가로 인한 불가피한 뇌혈관외과 수술의 감소와 수익성저하로 경쟁력이 떨어진 뇌혈관외과 분야를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 맡겨두어 고사된

결과이다. 국가의 통제하에 있는 중증 필수의료에 대한 원가이하의 낮은 의료수가가 그 직접적인 원인이다. 그나마 지금의 상황도 이 분야의 의료인들의 개별적, 집단적 노력과 희생의 결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의 노력으로 유지, 발전시켜야 할 이유가 분명하다.

그동안 국가는 저수가, 저급여, 저비용의 의료정책으로 지금의 기형적 구조의 의료체계를 수수방관 하였다. 국민의 건강을 지켜낼 공공의료, 필수의료의 최종 지향점으로 가는 길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간다는 진실을 국가, 국민, 의료계 모두가 다 알고 있다. 이제는 서로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간과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도 왜곡되고 기형적인 의료제도 때문에 발생된 사건을 의료인 개인이나 의료기관에 책임을 전가하려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필수의료 분야 인력 부족을 의사전체 인력부족으로 몰아 무작정 의사수를 늘리기 위해 공공, 지방의대 신설하려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보지 못한 것이며 문제의 해결이 아닌 정치적인 논점으로 용납할 수 없다. 히포크라테스, 허준, 슈바이처 등을 소환하여 묵묵히 소신을 다해 일하고 있는 의사를 사회를 매도해서는 안된다. 이제는 국가가 나서야 한다. 국민적 공감대를 국가가 나서 직접 이끌어 내야 한다. 의사가 환자 곁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기고



오덕렬 창작수필 작가·전 광주교 교장

내가 '창작수필을 평가하다'라는 수필 평문집을 냈을 때다. 수필가이면서 출판사를 경영하는 한 분이 "왜, 꼭 창작수필을 평가하는가?"라고 물었다. 나는 직감적으로 "아, 저 분이 '창작'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구나!" 생각했다. 그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수필은 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냥'이란 말은 창작수필이 아닌 일반 수필이란 뜻이다. 일반 수필엔 체계적인 수필론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대가 없어 평할 수가 없는 것이다.

수필 교실에서 흔히 말하는 '합평(合評)'이라는 말은 문학적 의미로는 틀린 말이다.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모여, 수필론도 없는 수필을 평가하? 여기서서는 겨우 문장을 가지고, 이런 표현은 좋고, 저런 표현은 조금 더 다듬어야 하고... 이런 감상평이 고작일 것이다. 결국 문장 다듬기에 그칠 수밖에 없는 일이다.

문학인 수필도 진화한다. 수필은 작가가 곧 화자(話

AI시대의 문학, '수필의 시'를 맞이하자

者)다. 그래서 수필은 '나'는 이라고 첫 문장부터 시작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수필의 원조인 몽테뉴의 '에세(essais)'는 '수상록'으로 번역됐지만 '나'의 존재를 제대로 알기 위한 몽테뉴의 치열한 시도였던 것이다. 에세는 곧 영구적으로 건너가 영구적 이름에세이가 되었고, 25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뒤에 찰스 램의 작품 '꿈속의 아이들'에 와서 화자가 3인칭으로 바뀐다. 화자가 1인칭에서 3인칭으로 바뀌는 진화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한 마디로 말하면 수필도 문학 대열에 올라섰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램은 에세이(수필)의 완성자로 추앙받고 있다.

수필은 '변방문학'이니 '여기의 문학'이니, 심지어 '수필도 문학이냐'는 비아냥거리는 소리까지 들어야 했다. 수필 화자가 3인칭으로 변하면서 시나 소설처럼 진정한 순문학의 길에 들어서면서 문학 대접을 받게 되었다. 순문학이란 '상상'과 '허구'가 도입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순문학 수필은 갑오개혁 무렵에 서양 문예사조와 함께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그 한 줄기가 '창작적 진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 여기서 창작·창작적인 수필, 최남선의 '가을'('청춘' 11월호)이 탄생하였다. 이러한 수필의 창작적 변화의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창작수필인 '수필의 시'를 제대로 감상할 수 없게 된다. '수필은 붓 가는 대로' 쓴 글이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다. 작가와 독자가 소통하려면 그 장르의 기본 소양은 이해해야 하겠다. 아는 만큼 보인다.

한국문학 수필분과 회원 3600여 명 중에서 창작수필의 핵인 '상상'과 '허구'를 제대로 이해하는 수가 얼마나 될까? 모든 장르의 문학은 작가와 독자와의 대화다. 대화는 서로 수준이 맞아야 한다. 지금은 그냥 수필 시대가 아니다. 창작수필 시대로, '수필의 시'가 독자에게 말을 걸어오는 시대다.

지금은 농경사회 농사법으로 벼농사를 짓지 않는다. 이양기로 모를 내고, 콤바인으로 벼를 베면서 탈곡까지 한다. 농사법도 시대에 따라 이렇게 변한 것이다. 수필도 창작적 진화를 거듭하여 얼마 안 있어 창작수필인 '수필의 시'가 모든 장르의 한가운데서 왕자 자리에 앉게 되는 날이 올 것을, 나는 확신한다. AI시대에 소설은 너무 길고, 시는 난해시로 전락했다. 그런 사이에 시를 품은 수필인 '수필의 시'는 잃어버린 이야기와 버림받은 '문장부호' 하나까지도 살려 쓰고 있다.

현명한 수필 독자들이시여! 독자들은 문학의 지각 변동을 감지하고, 미래 문학인 수필로, 창작수필로 불리는 현상을 보이고 있지 않나. 변혁은 결코 중심부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변방에서 개혁의 기운은 솟는다. 주위에 사·소설·희곡·문학평론은 물론 창작적인 변화를 용인하는 기타 시문을 모두 포용하는 AI시대의 문학, '수필의 시'를 맞이하자. 수필 독자여, 가슴 뛰지 않는가!

社說

서민가계 위협하는 지역물가 방치할건가

추석 명절이 한달 여 앞으로 다가오는 가운데 성수품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밥상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광주·전남 지역 물가가 각각 4.9%, 5.5%로 인상되는 등 물가 상승률이 국제금융 외환위기수준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여 가계의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다.

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1~7월 누계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광주는 4.9%, 전남은 5.5% 올랐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4.9%로 집계됐다. 물가 누계 상승률은 전 세계 금융위기가 닥쳤던 지난 2008년 연간 수준(광주 4.7%·전남 4.8%)을 이미 뛰어넘은 상태다.

문제는 추석을 한 달 남긴 상황에서 이같은 가파른 물가상승률이 제수용품 등 식품 물가인상에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달 호남지방통계청이 조사한 농축수산물 78개 품목 가운데

57개가 전년보다 가격이 올랐다. 특히 이 가운데 광주 37개 품목과 전남의 34개 품목은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다. 지난달 광주에서 가장 많이 오른 농축수산물 물은 체리(75.8%)와 오이(72.4%), 호박(69.6%), 배추(65.4%) 등이었다. 또한 국제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해 식용유(광주 58.2%·전남 47.4%)와 밀가루(광주 40.4%·전남 42.5%), 설탕(광주 20.3%·전남 19.2%) 등 주요 가공식품값도 뛰어올라 가계의 부담이 커진 상태다.

물가상승은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켜 경기침체를 유발하고 실소득을 줄이는 주범이다. 특히 국민이 체감하는 장바구니 물가는 통계수치 보다 더 위협적인 만큼 국제원재료 상승 등 대외여건 탓으로 방치하면 안된다. 따라서 일회성 보여주기식 대책이 아니라 생필품 수급관리와 제수용품 직거래 확대 등 예년 보다 빠른 지역 물가관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마실 물도 없다' 극심한 가뭄 장기화 대책을

중부지방이 '물 폭탄'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지만 광주·전남지역은 불발더위와 가뭄에 허덕이는 이상기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댐과 저수지가 메말라가고 저수율이 30~40%인 지역이 속출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한 자릿수의 저수율을 기록하는 등 심각한 물 부족 사태에 직면했다. 특히 전남의 일부 섬은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제한급수가 이뤄지고 있고, 화순의 한 마을에서는 마을 지하수가 말라 식수를 공급받아 먹고 생활용수는 급한 대로 농업용수를 끌어다 쓰고 있는 상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의 주요 원인으로 지난해보다 현저하게 줄어든 강수량을 지목한다. 광주지방기상청의 7월 기후특성 분석결과를 보면 광주·전남의 강수량이 200.7mm로 평년 259.4mm에 미치지 못했는데, 특히 장마철 강수량은 평년의 61% 수준에 그쳤다. 강수량에 의존하는 지역 저수지들이 기후변화로 강수량이 극단적으로 줄어들면서 저수율 하락, 농업

용수와 식수 부족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지역 주요 용수의 저수율(지난 4일 기준)에서도 확인된다. 광주·전남의 식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주암댐의 경우 저수율 34.5%로 지난해 같은 기간 62.4%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평균 저수율 51.9%에도 한참 모자란다.

하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다. 연일 불발더위가 지속하고 있고 당분간 가뭄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돼 식수와 농업용수 등 물 부족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이번 위기는 이상기후에 따른 전 지구적 차원의 자연재해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걸맞은 상황인식과 더욱 적극적인 대응책이 요구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가뭄이 지역민들의 생계와 직결되고 있는 만큼 지역에 맞는 현실적인 방안은 물론 차제에 장기적인 가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편지는 가장 오래된 통신 매체 가운데 하나다. 인터넷과 휴대전화 보급이 이전인 90년대까지만 해도 편지의 위상은 절대적이었다. 정치는 물론 외교와 경제, 전쟁과 관련된 문제도 종종 편지를 매개로 기록됐다. 편지는 누구나 쓸 수 있다는 보편성과 어떤 이의 글은 널리 회자된다는 점에서 특수성을 지닌다.

유명 인사든 장삼이사든 인간 본연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편지로 영어(醜態)의 상태에서 쓴 경우를 빼놓을 수 없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깨알 같은 글씨로 써내려간 '옥중서신'은 언제 읽어도 뭉클한 감동을 준다. 그

최근 국정농단 사태로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광복절 사면을 호소하는 옥중편지를 대통령실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범조계에 따르면 최 씨는

자필 탄원서에서 "저를 비롯해 전 정권 하에 억울하게 투옥된 분들을 이번 8·15 광복절에 대서면 해달라"며 "새 정권에선 전 정권에서 벌여졌던 악랄함이 없을 것"이라며 간곡히 사면을 호소했다.

최서원 씨의 자필탄원서와 맞물려 떠오르는 편지가 있는데 바로 고(故) 신영복 성공회대 석좌교수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이맘때 쓴 것으로 보이는 구절은 인간에 대한 깊은 성찰을 느끼게 한다. "없는 사람이 살기는 겨울보다 여름이 낫다고 하지만 교도소의 우리들은 없이 살기가 더합니다만 차라리 겨울

을 택합니다. 왜냐하면 여름 정역의 열 가지 스무 가지 장점을 일시에 무색해 해버리는 결정적인 사실- 여름 정역은 자기의 바로 옆 사람을 중요하게 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같은 감옥이지만 누가 쓴 편지에 따라 그 감동과 격은 천양지차다. 고테가 편지를 "한 사람이 남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록"이라고 말한 것은 그 때문인 듯하다. 오늘 우리는 어떤 편지를 남겨야 할까.

/박성천 여론매체부 부국장skypark@

편지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政	논설실장 程厚植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52 경 제 부 220-0663 사 회 부 220-0642 전 남 본 부 220-0680	(대표 FAX 222-4918) 문 화 부 220-0661 예 행 부 220-0692 사 진 부 220-0693 체 육 부 220-0621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문 화 사 업 국 220-0541 (FAX 222-0195)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